

FIS 한국재정정보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08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

월간 나라재정 2024 August Vol.92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8

재정 INSIGHT
통계로 보는 K-컬처 재정사업
재정 칼럼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 그땐 그랬지



2024 August
Vol.92

FIS 한국재정정보원



CONTENTS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K-컬처 재정사업

06 재정 칼럼

K-콘텐츠 지속 투자, 한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정책적 과제
-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 NOW

16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8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30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시장실패에 대한 시각(2): 거래비용 경제학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8 재정, 그땐 그랬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1984-2006) 회고
-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전) 기획예산처 차관

K-culture 진흥을 위한 재정의 역할
- 배상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멘토단 교수

52 일상 속 경제·재정 이야기

친환경 올림픽: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교훈
- 남시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56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58 재정 캘린더

60 애독자 코너

월간 나라재정
2024 AUGUST VOL. 92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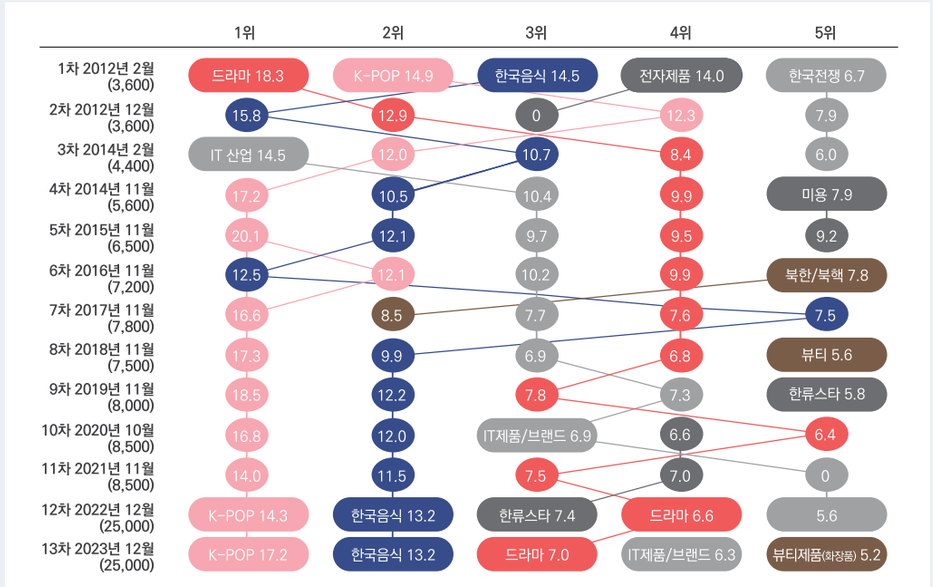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K-컬처 재정사업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7년 연속 K-팝(17.2%)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IT제품 및 브랜드(6.3%), 뷰티 제품 순이다. 과거 1~3위에 위치했던 'IT제품/서비스' 혹은 '북한/북핵', '한국전쟁' 등이 뒷순위로 밀려나거나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문화콘텐츠가 채워나가고 있을 만큼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 한국 연상 이미지〉

(단위 : 전체 응답자 대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K-컬처 육성을 위한 재정사업은 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4년 이 분야 예산은 8.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3%를 차지한다. 하위 다섯 개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부문으로, 4.0조원 규모이다.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예산은 작년보다 1,566억 원 증가한 9,84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이에 마련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 육성, K-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올해부터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23년 1,900억 원 → '24년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하는 데 172억 원을 투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AI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다지는 등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24 K-콘텐츠 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

- [증액]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억 원 ('23년 1,900억 원)
- [증액] **게임산업 육성 :** 679억 원 ('23년 661억 원)
- [증액] **콘텐츠 해외거점 운영 :** 219억 원 ('23년 102억 원)
- [증액]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R&D) :** 85억 원 ('23년 20억 원)
- [증액] **국외 한국어 보급(세종학당 등) :** 610억 원 ('23년 562억 원)
- [신규]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 92억 원
-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 10억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3.12.21.)

K-콘텐츠 지속 투자, 한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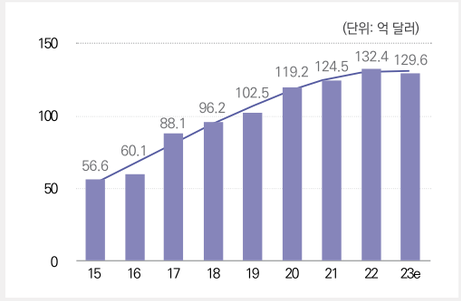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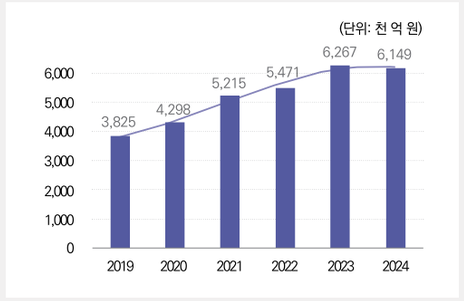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언제까지 지속가능한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시즌2〉의 연내 방영 일정이 공개되어 화제다. 오징어게임은 K-콘텐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놀이가 아닌 드라마 제목으로 더욱 익숙하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소비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지금, 이번 시즌2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시즌1을 봤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광할 수 있을까? 물론 오징어게임은 역량 있는 창작자와 제작자가 모여 만든 검증된 콘텐츠이기에 그 우수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 콘텐츠산업과 그에 따른 성공 기회는 오징어게임 시즌1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3년 전과는 다른 시각, 다른 환경으로 봐야 한다.

팬데믹 시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에 힘입어 K-드라마, K-팝, K-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에 없던 위상에 올랐다. 팬데믹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콘텐츠산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매출 6%, 수출은 8.3%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 산업 성장률 2.2%, 수출 성장률 3.1% 대비하여 높은 수치다. 2021년 뉴욕타임스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유명하던 나라가 BTS, 오징어게임 등 창의성으로 만든 신선한 콘텐츠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했다. 전 세계 한류팬 현황도 2023년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2년 926만 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 콘텐츠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도 지속상승하며 산업성장을 뒷받침했다.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 성장 현황(15~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현황(19~24)

그러나 K-콘텐츠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을까? 이미 '23년 콘텐츠산업의 성장세는 이전 대비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모두가 K-콘텐츠의 기회와 성공을 말했지만, 세계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있다.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콘텐츠시장이 지속 확장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취향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이용자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콘텐츠는 다른 상품과 달리 맘에 든다고 해서 양껏 구매하여 챙겨둘 수 없다. 사람이 가진 24시간 중에 먹고, 자는 필수적인 시간 외의 재충전을 위해 콘텐츠가 선택된다. 콘텐츠는 재미있으면 선택받지만 자신의 시간을 투자 할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외면당하고, 외면한 이용자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기란 쉽지 않다.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다른 재미를 찾아 떠나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유지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다시 말해 질적으로 우수한 K-콘텐츠를 양적으로 많이 발굴·지원하여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K-콘텐츠, 자금과 인력 지속 투자로 이어가야

콘진원은 장르별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K-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수천만 원대에서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다양하지만, 이는 높아져가는 제작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지는 못하는 소액이다. 그러나 업계에는 이 지원금이 어려운 제작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디딤돌이자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원금은 종자돈(Seed Money)로서 민간자금의 투융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마중물, 또는 작품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인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콘진원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시에도 바이어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기업은 작은 규모의 보조금이더라도 장르별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지원사업설명회에는 지원금을 지렛대 삼아 더 넓은 시장으로 도전하는 콘텐츠 전 장르의 산업 종사자가 모여 발디딜틈이 없다.



2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설명회 사진

콘텐츠산업의 도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도 중요하다. 콘텐츠 창의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산업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로벌 이용자들의 수요를 포착하고 이끌어내는 안목과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의 완성도와 표현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콘텐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융합형 인재도 필요하다. 이에 창의인재 스스로 이용자가 필요한 것을 찾아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창의인재들이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창의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야가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로 대두될지 알 수 없기에, 실험적인 작품 시도를 통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콘텐츠에 대한 방향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지각색의 재능을 가진 개성 있는 인재들이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야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콘진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작

일례로 콘진원에서 13년째 운영 중인 콘텐츠 인재양성프로그램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멘티로 참가했던 장재현 감독은 "12년 전 창의인재동반사업 덕분에 첫 단편작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파묘>의 성공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그 결실들이 K-콘텐츠를 글로벌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창의인재동반사업을 통해 발굴한 장재현 감독의 단편작은 신선한 오컬트물이었고, 이는 <검은 사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장편 영화화되어 한국형 오컬트물의 대표작이 되었다. 뒤이어 영화 <파묘>는 전 세계 133개국에 판매되고, 동남아시아, 미주에서도 흥행하며 글로벌 K-콘텐츠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오랜 투자가 산업의 한 장르를 대표하는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다.



창의인재동반사업 멘티 출신 장재현 감독의 대표작

이렇듯 꾸준한 지원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K-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그 시장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을 파악하는 범위에는 수출을 위한 관련국가 법·제도, 바이어, 기업 등 정보에서부터 콘텐츠 소비자들의 특성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콘텐츠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에 스며들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문화감수성 고려를 위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콘텐츠기업은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모두 직접 이러한 정보를 조사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이들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더욱 절실하다.

콘진원은 올해까지 전 세계 총 25개 도시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는 50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콘진원 해외비즈니스 센터는 11만 5천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시장조사에서부터 콘텐츠 관련 문화교류, 연관산업 수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를 지원한다. 작은 시장도 놓치지 않고 K-콘텐츠 진출을 시도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많은 한류팬들도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콘텐츠는 경험을 해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경험재이고, 이를 소비하기 위한 수요를 만들어 내려면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K-콘텐츠가 주는 긍정적인 경험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시작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다각적 지원 필요

K-콘텐츠가 유사 이래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졌다고 모두가 말한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산업은 아직 선보이지 못한 창의성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지금이 정점이 아닌 더 높은 도약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위상이 K-콘텐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한다면 더욱 큰 투자를 통해 그 기회의 물꼬를 크게 열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자들은 언제든지 판도를 바꿀 수 있다. 한국콘텐츠산업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만든 뛰어난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도 적절한 시기에 세계시장에 충분히 선보이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무대를 금세 잃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회와 위기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봐야한다. 그리고 새롭고,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말하자면 질적으로 우수한 K-콘텐츠가 양적으로 더 많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식의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3 K-박람회 IN 방콕 K-팝 콘서트 현장


2024 K-STORY & COMICS IN LA 전시 현장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정책적 과제[1]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K-컬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아가씨, 기생충과 같은 영화에서부터 에미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세계적인 탑스타의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최근 K-컬처의 약진을 과거와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창해상전(滄海桑田), 능곡지변(陵谷之變)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K-컬처의 인기는 방한 인바운드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에서 K-팝, 한류스타와 관련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16.0%에 달하고 있다.[2]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성별, 연령별로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의 20.4%, 15-19세의 40.3%, 20대의 25.5%가 소위 K-컬처와 관련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방한했다고 응답하였다.

1)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소속기관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
2) 중복 응답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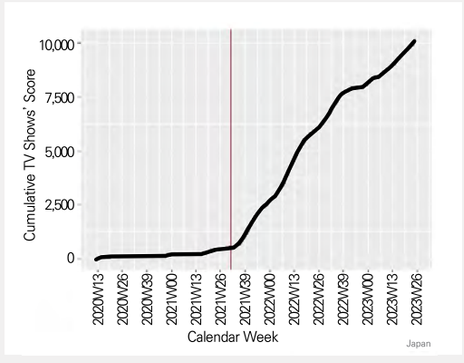
[표] 방한 고려 요인: K-팝/한류스타 관련 장소 방문

연도	전체	여성	남성	15-19세	20대
2023년	16.0%	20.4%	7.0%	40.3%	25.5%
2022년	12.9%	16.9%	4.9%	21.3%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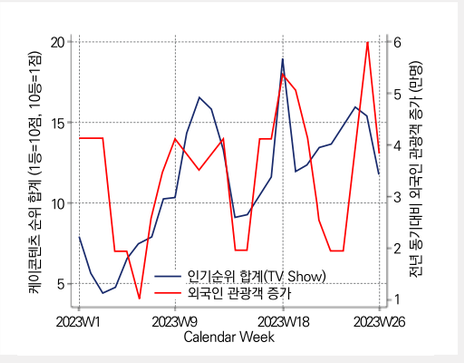
자료: 2023 외래관광객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K-콘텐츠의 인기가 직접적인 인바운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 이후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K-콘텐츠의 인기가 국가를 막론하고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K-콘텐츠가 외국에서 인기있는 기간에는 해당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그림>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TV Show 가운데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K-콘텐츠의 인기 순위와 방한 일본인 관광객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좌측의 그림은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K-콘텐츠 인기순위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며, 우측의 그림은 인기 순위 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변화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4] 이러한 점들은 모두 K-컬처가 인바운드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지하는 증거들이다.

[그림] K-콘텐츠(TV Show) 누적 인기 순위 및 방한 일본인 관광객



일본의 K-콘텐츠 누적 인기 순위



K-콘텐츠 주간 인기 순위 및 방한 일본인

3) 김형종, 이동은. (2023).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23-04.
4) 좌측 그림에서 적색선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으로 방영된 2021년 37주차를 의미한다. 좌측 그림의 인기 순위는 기간 전체에 걸친 누적 인기 순위, 우측 그림의 인기 순위는 주간 인기 순위 합계이다.

따라서, 방한 인바운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인바운드 관광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K-컬쳐의 인기와 별개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남아시아는 과거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K-컬쳐의 인기도 높고 1인당 소득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5]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지원은 K-인바운드 시장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성장, K-인바운드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유치 자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나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인바운드 시장의 정책 목표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관광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고용이나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데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K-인바운드 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율도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는 많은 정부부처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증 발급에는 사증 심사 인력, 심사센터 등이 필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방한을 위해서는 한국과 연결된 항공노선이나 항로가 존재하여야 한다.[6]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와 같은 입국 제한 제도도 있다.[7] 외국인 한 명의 입국에도 다수의 정부부처와 정책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입국이 아니라 지속적인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한 부처들의 정책적 조율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구글맵, 우버와 같은 국제적인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사례의 하나이고, 국제운전면허증 인증, 외국인 자동차 렌트 등도 유사한 불편 사례이다.[8] 우리나라 내에서 지도를 보기 힘들고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점들은 지방 공항의 노선 부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다수가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단일 부처의 수준에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지금보다 속도감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주기적이고 구속력 있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9]

또한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는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유치를 저해하는 제도는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사후평가(policy evaluation)를 포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이한 부처의 다양한 정책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처의 정책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지원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10] 따라서 정책지원의 사후평가는 기획재정부나 총리실 등에서 주기적·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조율을 실시한다면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K-인바운드 관광의 미래는 긍정적인 편이다. K-컬쳐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고 동아시아 및 인접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준수하다. 따라서 방문 자체를 조장(助長)하기 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의 구글맵 사용이나 외국인 공유 렌트카 허용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 향상과 함께 서울 외 지역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역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지원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적시에 긍정적인 정책의 확대와 개선을 해나간다면, K-인바운드 관광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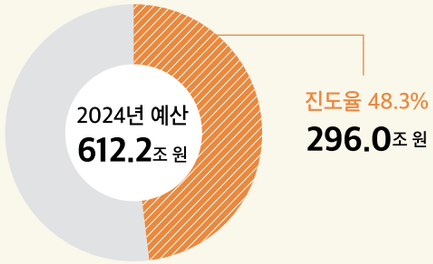
---

5) 김형종. (2023). 경제 성장, 환율, 지리적 위치, 그리고 방한 관광. 한국관광정책 제91호, 70–77.
6) 크루즈 여행처럼 바다를 통해서 입국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7)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사증 면제와 배치되나 불법체류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유를 막론하고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운영된다면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는 크게 상충하는 셈이다.
8)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렌트카 역시 전통적인 방식의 렌트만 가능하고 공유 렌트카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9) 현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존재하지만, 관광분야의 국가적인 중요 어젠다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실무자들이 부처간 정책 협의를 실시하는 자리는 아니다.
10) 현대적인 정책 평가 기법들은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실험군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기준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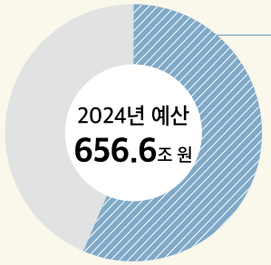


총수입 **296.0조 원**



진도율 48.3%
296.0조 원

총지출 **371.9조 원**



진도율 56.6%
371.9조 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76.0조 원 적자 (누적 기준)	103.4조 원 적자 (누적 기준)	1,145.9조 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8.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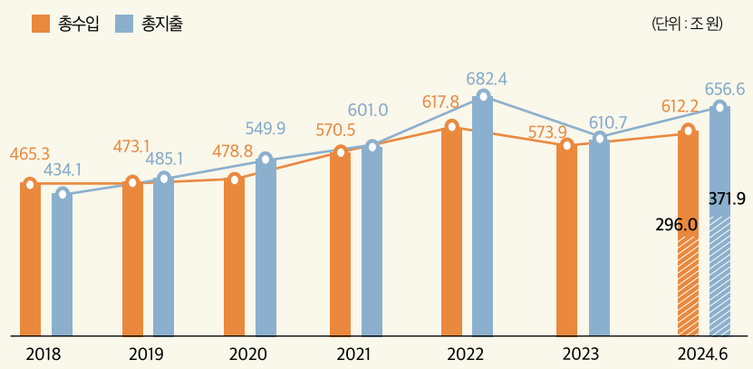
296.0조 원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총지출

371.9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0.3조 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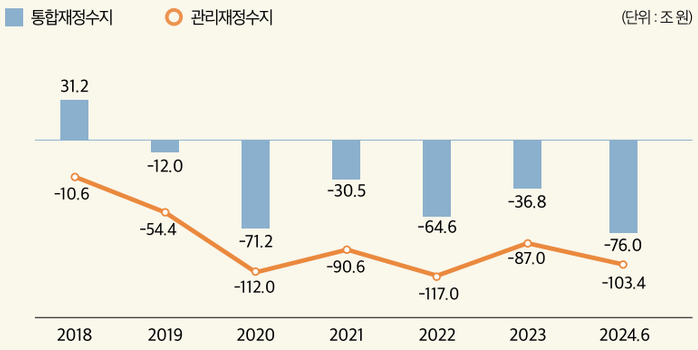
76.0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0.5조 원

관리재정수지

103.4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0.4조 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4조 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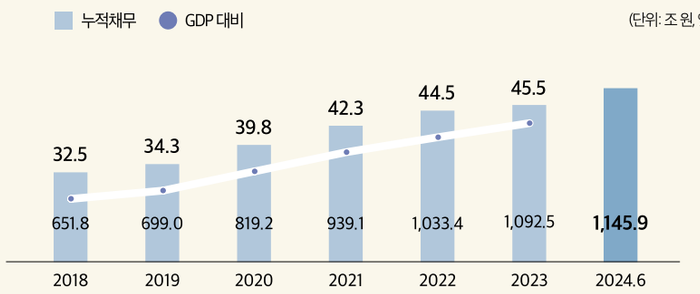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145.9조 원

전월 대비
-0.9조 원

전년 말 대비
+53.4조 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미국

◎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이민 급증이 연방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민 증가로 연방 적자는 0.9조 달러 감소하고 GDP는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재무부, 인플레이션 및 부채에 관한 IMF와의 '2024년 제4조 협의'에 관한 미국 성명 발표

2) 독일

◎ 독일 연정, 총 4,810억 유로 규모의 '25년 예산 및 성장 이니셔티브 채택

3) 일본

◎ 기시다 총리는 중장기경제·재정 시산 결과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을 발표

4) 프랑스

◎ 프랑스 국가 감사원,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0%p, 예산 적자는 GDP의 5.5%p를 기록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경각심 표명

5) 영국

◎ 영국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220억 파운드(약 39조 1천억 원) 재정 적자 해결 위해 향후 2년간 총 135억 파운드(약 24조 원) 공공지출 삭감 계획 발표

◎ 노동당 정부, 2024년 선거 공약 이행 위해 예산 책임 사무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재정 독립성 보장 법안 하원에 제출

국제기구

1) IMF

◎ 세계 최대 경제 30개국에 대한 대외부문 평가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에서 대외부문 수지 재조정과 다자주의 무역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간 공조를 주문

2) OECD

◎ 국가간 조세협력에 대한 리우데자네이루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 발표를 환영하며, 디지털세 필라1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약 촉구

3) EU

◎ 2025년 유로존 성명에서 유로존 전체에 대한 긴축적 재정 예고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 지
미국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3조 7,542억 달러	5조 225억 달러	1조 2,683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0.0%	4.5%	9.0%
독일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6개월 차)	규모	1,964억 유로	2,220억 유로	236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3%	-4.0%	-50.6%
일본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2개월 차)	규모	8조 4,323억 엔	17조 9,947억 엔	9조 5,624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966.9% (-16.2%)	3.4%	-42.5% (4.3%)
프랑스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1,296억 유로	2,218억 유로	922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0.6%	2.4%	5.0%
영국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882억 파운드	1,027억 파운드	145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8%	-1.5%	18%

*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June 2024(7.11.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7.19.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중 괄호 내 수치는 공채금을 제외한 수입 기준임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June 2024(7.23. 발표)
프랑스) Agence France Tresor, Monthly Bulletin, July 2024(No.410)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June 2024(7.19. 발표)

대한민국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6개월 차)	규모	296.0조 원	371.9조 원	76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0.1%	5.7%	37.2%

미국

7.2.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이민 급증이 연방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1]

- **의회예산처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이민 증가는 의무 지출과 부채에 대한 이자를 증가시키나 연방 수입에도 기여하여 향후 10년 동안 순 적자는 0.9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4~'34년 기간 동안 연방 수입은 1.2조 달러 증가, 연방 지출은 0.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대규모 수입 증가는 이민자들이 지불하는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의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출 증가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34년까지 이민 급증은 GDP를 3.2%(1조 3천억 달러) 증가시키며, 10년 간 총 8조 9,000억 달러 증가 예상**
  - 재정 부문에서는 총 임금의 증가로 급여세 및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노동력의 성장과 주택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은 지출 증가에 기여

7.17. 인플레이션 및 부채에 관한 IMF와의 '2024년 제4조 협의'에 대한 미국 성명 발표[2]

- **IMF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4년 4월 기준 2.7%로, 인플레이션을 2%에 도달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현재 정책 금리를 유지하라고 조언**
  -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2년 중반 대비 4.4%p 감소하였으며, '25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2%를 달성하고, 정책 금리는 중립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정책 금리를 525bp 인상하는 등 FOMC* 목표인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인플레이션 2% 달성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금리 인하를 삼가야할 것을 지적
- **'23년에 시행된 재정 책임법에도 불구하고 연방 적자는 24회계연도 GDP대비 약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정부 적자는 전년대비 0.2% 증가**
  - 현재 정책에 따르면 '32년까지 부채는 GDP 대비 140% 초과할 것으로 전망
  - '33년까지 연방 적자를 GDP 대비 약 1.25% 줄이기 위해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간접세 및 소비세 인상, 부실 세금 지출 축소와 같은 옵션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이러한 정책으로 얻은 재정 절감액의 일부를 빈곤 완화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코로나 이후 여전히 높은 빈곤율을 해결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 https://www.cbo.gov/publication/60165
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4/07/18/United-States-2024-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52100

독일

7.17. 독일 연정 내각, 2028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이 포함된 '25년 예산 및 성장 이니셔티브 채택[3]

- **'25년 독일 예산은 총 4,810억 유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 780억 유로의 투자와 438억 유로의 순차입금을 포함하며, 이는 지출 상한선(debt-brake)을 준수**
  - 금번 예산은 내부 및 외부 보안 강화, 사회적 결속, 세제 개선, 기후변화대응 및 경제 성장 촉진 등의 내용을 우선순위로 함
  - 한편 '25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4년 추경 예산안은 11월 8일 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내년 예산은 11월 29일에 통과될 예정
- **또한 독일 재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장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기 부양의 틀을 마련**
  -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이니셔티브로 인해 경제 성장이 강화되어 내년에 60억 유로의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프랑스

7.15. 프랑스 국가 감사원, 프랑스의 예산 적자와 부채 통제 실패를 경고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경각심 표명[4]

-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현재 3.1조 유로로 GDP의 110%에 달하며, 지난해 예산 적자는 1,540억 유로로 GDP의 5.5%를 기록**
  - 이는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이어(Bruno Le Maire)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이며, '22년보다 0.7%p 증가한 수치
  - 프랑스는 이제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에 직면
- **또한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직면해 있음**
  - '30년까지 가계, 기업, 국가에 연간 600억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며, 전기자동차가 내연 기관을 대체함에 따라 화석 연료 세금 수입이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문제 발생
  - 이로 인한 투자 증가 필요성, 세수 손실, 성장 감소 등의 요인을 반영하면, '30년 기준 공공 부채 비율 전망치는 GDP의 약 7%p 가량 높아질 것임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2025-budget-growth-initiative-2299754
4) https://www.ft.com/content/1d41857d-8d6d-4e0a-a44b-fc6fcce5650f

영국

7.29. 영국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220억 파운드(약 39조 1천억 원) 재정 적자 해결 위해 향후 2년간 55억 파운드, 81억 파운드 총 135억 파운드(약 24조 원) 공공지출 삭감 계획 발표[5]

- **전 정부 기획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폐지 및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재검토**
  - 스톤헨지 인근 17억 파운드 규모 터널 공사와 90억 파운드 규모 로어 템스 크로싱(Lower Thames Crossing)* 건설 중단, 64억 파운드 규모 르완다 난민 망명 정책 수정

  * 런던 동부 관통하는 22.5km 길이의 도로와 터널
- **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 연료비 지원 대상자 현재 1천 14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으로 감소 전망**
  - 연금 크레딧을 받는 가구와 80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연금 크레딧 받는 가구에 각각 200파운드, 300파운드 겨울 연료비 지급 계획
-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파업 종식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급여 인상 검토 권고안은 전면 수용**
  -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교육 부문 급여 심의 기구는 5.5% 인상 확정, 주니어 의사에겐 2년 간 22.3% 급여 지급 합의
  -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교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하루 3억 파운드, NHS 파업으로 인한 총 비용은 17억 파운드

7.18. 노동당 정부, 2024년 선거 공약 이행으로 예산 책임 사무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재정 독립성 보장 법안 하원에 제출[6]

- **영국 GDP의 1% (약 300억 파운드) 이상 영구적 세금 및 세출 변화에 대한 예산 책임 사무국의 독립적 감시 및 평가 권한 강화**
  - 정부의 대규모 재정 계획에 대해 OBR 예측 요청이 없을 경우 재정위원회에 경고가 주어지고, 재정 잠금(Fiscal Lock)*이 발동되며, 정부는 OBR의 평가를 받은 후에만 재정 조치 시행 가능

  * 정부가 대규모 재정 계획이나 세금 지출 공약에 대해 OBR의 예측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발동되는 규제 조치로서 정부가 충분한 재정 분석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예산 책임 사무소의 독립적 평가는 시장 안정성과 공공 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2022년 9월 45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이 OBR 평가 없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파운드화 가치 폭락과 정부의 개입 초래
  - 재무장관(Rachel Reeves)은 예산 책임 법안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며 인플레이션, 주택담보대출, 세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가계 건전성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

일본

7.29.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장기경제 재정 시산 결과 2025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을 발표[7]

- **민간 내수 주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내년도 기초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소비 회복을 위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소득 · 임금 증가율 정책을 유지할 계획

  * 금년 노사협상에 따르면 임금상승률은 5.1%로 33년래 최고 수준
  - 증거기반정책결정을 강화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금리인상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재정건전화 대처를 계속해 갈 것임을 발표
- **한편 일본 내각부는 뒤이어 발간(8.2.)한 경제 · 재정백서에서 최근의 기업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하고 사내 유보가 과다해 잠재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진단[8]**
  - 인력 부족에 의한 성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직종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훈련과 고용자의 3.4%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지원을 제시
  -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은퇴 후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약 40%의 회사들이 은퇴 전 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_일본 수상관저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i-will-take-the-difficult-decisions-to-restore-economic-stability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troduces-new-fiscal-lock-law-to-deliver-economic-stability-and-protect-family-finances
7) 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407/29keizai.html
8) www5.cao.go.jp/j-j/wp/wp-je24/index_pdf.html

IMF

7.12. '불균형이 후퇴하다'를 주제로 세계 경제 규모 상위 30개국의 대외부문 평가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 발표[9]

- **IMF는 해마다 발표하는 본 보고서의 '24년판에서, 세계 대외적 정책의 변화와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위험과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을 제시**
  - 국가별 경상 수지 절댓값의 합으로 정의하는 세계경상수지(The global current account balance), 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여 안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진단
  - 과도한 무역 불균형은 자본 흐름을 갑작스럽게 방해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며 상품가격이 급등하는 등 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정책 권고 사항으로, 대외부문 수지 재조정과 다자주의 무역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주문**
  - 적자 지속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경쟁력 향상에도 유용할 것이며, 흑자 지속 국가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저축을 통해서라도 초과 저축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권고
  - 국가 간 정책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자주의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투명한 무역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ECD

7.27. OECD사무총장은 G20 재무장관들이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단독 과세체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10]

- **재무장관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는 OECD의 '과세 목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통한 자동 정보 교환과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 마련, 도입이 가져온 성과라고 소개**
  - 또한 본 성명 발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 1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촉구
-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재무장관 회의는 이밖에도 빈곤과 불평등 해소,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금융등을 의제로 논의**

EU

7.16. 유로존 20개 회원국 재무 장관들, '25년 유로존 성명에서 내년에 새로운 EU 재정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유로존 전체에 대한 긴축적 재정이 이어질 것임을 제언[11]

- **성명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이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적절하다고 언급**
  - 유로그룹 의장인 파샬 도노호(Paschal Donohoe)는 이러한 변화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회원국이 7년이 아닌 4년이라는 기간 안에 재정 준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 **'25년 유로존의 공공 적자는 GDP의 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 공공 부채는 '23–'25년에 GDP의 약 90%로 예상**
  - 특히 지속적인 EDP(과도한 적자,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EU 국가인 루마니아는 올해 EU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적자와 부채를 높은 수준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유로존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통합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



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ESR/Issues/2024/07/12/external-sector-report-2024
10) 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07/statement-by-the-oecd-secretary-general-g20-tax-declaration.html
11)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new-fiscal-rules-may-require-deeper-than-expected-spending-cuts-in-2025-eurogroup-signals/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1. IMF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

지난 7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는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4년과 2025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와 3.3%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의 세계 경제 전망(WEO)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치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여 금리는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무역 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2024년 1분기에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출 호조로 인해 글로벌 활동과 세계 무역이 강화된 한편, 일본과 미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았다. 일본은 주요 자동차 공장의 일시적 공급 중단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했고, 미국은 소비 둔화와 무역 부문의 부정적인 기여로 인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다. 유럽에서는 서비스 활동의 개선으로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중국은 내수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및 통화 정책부문에서는 서비스부문 가격 상승의 지속으로 인해 세계적인 물가상승률 둔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가 지연되었다. 이는 유로존 및 캐나다와 같은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신흥 시장 경제의 경우 외부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4.7.16 기준)〉 (단위 : %, %p)

	'22년	'23년	'24년			'25년		
			4월 전망 (A)	7월 전망 (B)	조정폭 (B-A)	4월 전망 (C)	7월 전망 (D)	조정폭 (D-C)
세계	**3.5**	**3.3**	**3.2**	**3.2**	**0.0**	**3.2**	**3.3**	**+0.1**
미국	1.9	2.5	2.7	2.6	-0.1	1.9	1.9	0.0
독일	1.8	-0.2	0.2	0.2	0.0	1.3	1.3	0.0
프랑스	2.6	1.1	0.7	0.9	+0.2	1.4	1.3	-0.1
영국	4.3	0.1	0.5	0.7	+0.2	1.5	1.5	0.0
일본	1.0	1.9	0.9	0.7	-0.2	1.0	1.0	0.0
한국	**2.6**	**1.4**	**2.3**	**2.5**	**+0.2**	**2.3**	**2.2**	**-0.1**

금융 조건 및 재정 상황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규율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IMF는 2024년 비연료 상품 가격이 5%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은 4.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OPEC+의 석유 생산 감축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2024년 하반기에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부문 가격 인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부채 및 재정 리스크는 상승하고 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 자본 흐름을 방해하고 통화 정책 완화를 방해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동반될 부정적인 파급효과들은 장기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비용과 보복에 대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거시 구조 개혁을 빠르게 이행한다면 공급 증가,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우선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완화 정책을 자제하고 필요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나타낼 때에는 통화정책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은 장기 성장 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공급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이는 경제 회복력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성과 이민자의 경제 통합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정책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자원의 잘못된 배분과 같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글로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잡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 OECD 재정관리정보시스템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 현황

OECD는 지난 7월 26일 재정관리정보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에 38개 회원국 대상 설문을 배부하고, 34개국의 응답을 받아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시점은 2022.9.30.기준 시행중인 제도였고, 주 응답자는 회계·재정 부문 고위급 관료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회원국의 FMIS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앙화 정도(centralization)에 따른 구분을 보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10개국, 부분 중앙화 시스템은 20개국, 각 부처·기관이 독립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 4개국으로 볼 수 있다. 재정관리 기능의 통합화(integration)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미응답한 5개국을 제외하고 비통합 유형이 13개국, 핵심기능 통합 유형이 11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통합 유형은 5개국에 그쳤다.

2장은 향후 회원국 FMIS 업그레이드에 있어서의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위에서 구분한 '비통합 유형'을 제외한 16개국중 현재 운영중인 FMIS가 도입 10년차가 넘는 12개국에서, 효율성과 호환성 등의 문제가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ERP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일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높고 검증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장점이나, 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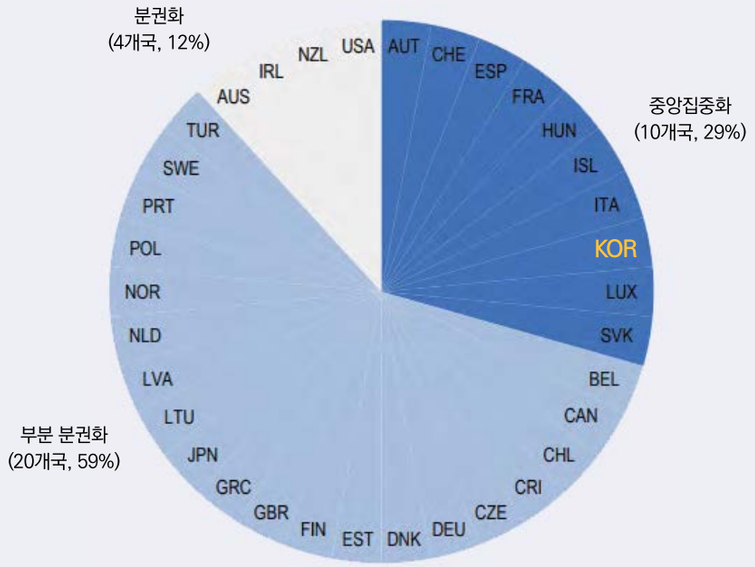


터마이징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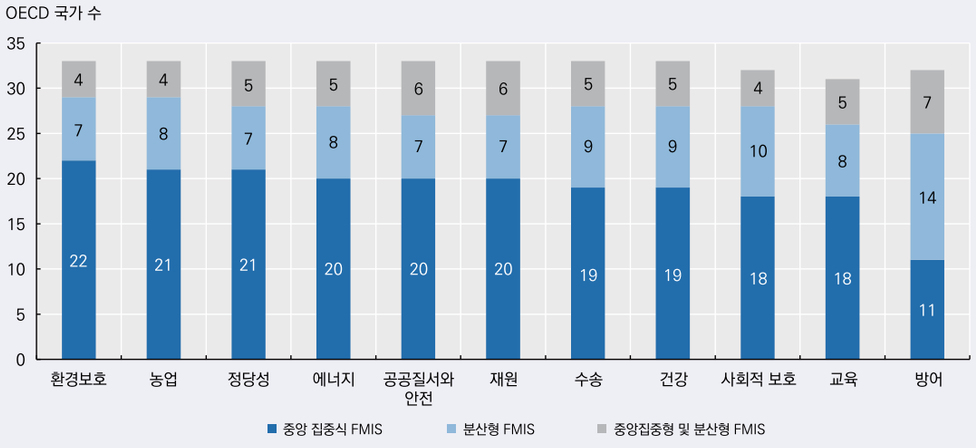
둘째는 내부 개발 또는 외부 개발사를 통해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높은 개발 비용과 시간 소요라는 과제가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확장성과 유연성, 복원력이 높은 점은 장점이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문제가 발생 가능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FMIS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는 원형 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 소프트웨어인 Business Intelligence(BI*)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인공지능, RPA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현대화, 직원 역량, 기술 용량, 데이터 문제등이 도전 과제로 남는다고 정리하였다.

〈국가별 FMIS 중앙집중화 유형〉



〈OECD 국가의 정부 기능별 FMIS 중앙화〉





시장실패에 대한 시각(2): 거래비용 경제학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dsoak@naver.com

코즈(Ronald H. Coase)의 거래비용은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상적인 최적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장이 실패했다면, 과연 무엇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이상의 달성에 집착하기보다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현재를 개선하는 점진적 노력이 중요할 뿐이다. 시각의 이러한 변화는 현실을 교정하는 정책수단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경제학은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정부개입만을 -세금, 보조금, 직접규제, 직접생산 등- 인식하였지만, 거래비용 중심의 경제분석은 기업조직과 거래계약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한다.

코즈의 주장은 핵심적인 세 편의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 '한계비용 논쟁(The Marginal Cost Controversy, 1946)',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로 압축된다.[1] 첫 번째 논문은 기업이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임을, 두 번째 논문은 평균비용이 지속 체감하는 자연독점 산업에서 제기되는 '한계비용 가격책정'의 문제를, 세 번째 논문은 외부효과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전통적 접근의 -손해배상, 피구조세, 직접규제- 문제를 각각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을 통해 더욱 발전하며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또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으로 자리 잡았는데,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조직과 거래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2]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존재 이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기업을 생산함수로 파악하던 1932년, 코즈는 약관 21세의 나이에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천착하였다. 코즈가 제기한 의문은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현실에서는 기업 내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있었다. 기업 내부에서 분할된 직무들은 일종의 분업인데, 왜 분업은 시장 대신에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을 다루는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5년 뒤 발표하였는데, 당시에는 거의 읽혀지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코즈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생산과정의 중간 투입물을 시장에서 구입한다면 기업은 시장의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기업 내부에서 생산한다면 기업은 조직의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의 거래비용과 조직의 관리비용에 따라 기업은 분업을 시장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조직내부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기업 내부의 업무 분장은 일종의 분업이고 업무 상호 간의 조정은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 관리비용 역시 광의의 거래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거래비용 규모에 따라 기업조직이 선택되기도 하고 시장기구가 선택되기도 한다.

기업의 외부에서는 가격이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그 자원의 사용은 시장에서 일련의 교환거래를 통해 조정된다. 기업의 내부에서는 이런 시장거래가 배제되고 자원배분은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원배분이 가격시스템에 맡겨질 수 있는데도, 왜 기업은 이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가? 그 주된 이유는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존재하고, 이 비용들은 관리체계의 사용에 의해서 회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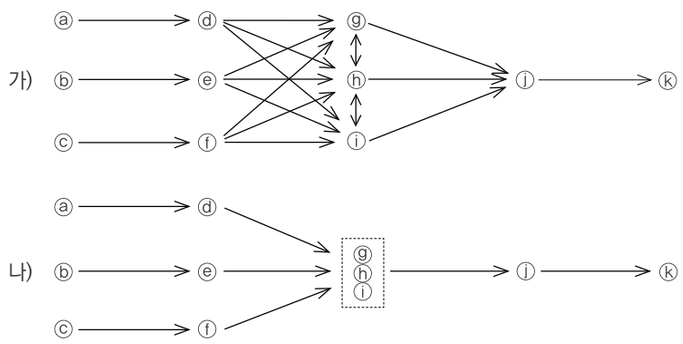
1) 이들과 몇 편의 논문을 묶어 발간한 소책자는 Coase, R.H.(198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의 한국어 번역본은 김일태, 이상호 번역, 「기업, 시장, 그리고 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8.

2) Williamson, Oliver E.(1975), *Markets and Hierarchies*, The Free Press 참조. 신제도경제학은 윌리엄슨이 창안한 용어로서,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도경제학과 구분된다.

타당한 가격이 얼마인가를 발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고, 각각의 시장거래를 위해 별개의 계약을 협상하고 완성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며,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비용들이 존재한다."[3]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에서 잘 드러나는데, ⓐ~ⓚ의 11개 분업에 의해 최종생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가)는 기업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거래자 ⓐ, ⓑ, ⓒ로부터 시작한 생산계열이 최종생산물 ⓚ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실선의 화살표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신호에 반응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수행하는 시장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그림 나)는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현된 기업조직이 등장하여 ⓖ, ⓗ, ⓘ의 분업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기업조직이 등장하여 복잡한 거래들이 단순하게 정리되는데, 이는 법인격으로서의 기업이 '계약의 구심체(nexus of contracts)'임을 보여준다.

〈계약 구심체로서의 기업조직〉



ⓖ, ⓗ, ⓘ가 통합된 기업조직 내에서는 시장거래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를 지시하는 기업가-조정자가 등장한다. 시장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은 기업가에게 조직형성의 권한 그리고 분업의 지시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시장의 고용계약으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기업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들은 기업가의 의도적인 조정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코즈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내·외부에서 체결되는 다양한 계약들의 유형을(고용계약, 장기계약, 리스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라이센스 계약) 이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4]

3) Coase(1988), pp.62~63 참조.
4) Coase(1998), pp.73~74 참조



코즈의 지적 이후에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은 기업이 시장과 함께 분업을 조정하는 대안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분석적으로 설명하였다.[5]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나타나는 이유, 즉 거래당사자들이 시장계약을 꺼려하는 이유는 (i)그들이 불확실하고 복잡한 거래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ii)그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서 '협력적 응변(cooperative adaptation)'의 조정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초래하는 '불확실성/복잡성'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와 협상의 중요성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비로소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외부효과가 상호성을 띤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하였다. 외부효과의 피해에 대해 법원은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아무런 영향을

5) Williamson(1975) 참조. 이 내용의 요약 및 이후 발전은 Williamson, Oliver E.(2002), "The Theory of the Firm as Governamce Structure: From Choice to Contra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3, pp.171~195 참조.

주지 못한다(소득분배는 논외로 한다). 코즈는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나타난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며, "권리의 획정은 시장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본질이다 … (생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법적 결정과 독립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였다.[6]

고전적 판례들을 대신하여 현대인들이 실감하는 사례를 예시한다면, 계곡 상류의 주민 A가 빨래를 위해 계곡 물을 사용하고 하류의 주민 B가 마실 물을 위해 계곡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B는 A의 빨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만약 빨래를 금지한다면 A가 손해를 볼 것이고 빨래를 계속 허용한다면 B가 손해를 볼 것이다(이는 외부효과의 상호성이다). 계곡에서 빨래할 권리와 음수(飮水)할 권리의 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했더라면,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A와 B는 서로 협상을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획정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본질'이다.

그런데 코즈는 정부가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건 -빨래할 권리를 중시하건 아니면 음수할 권리를 중시하건- 관계없이 A와 B의 협상 결과는 사회적으로 항상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A가 빨래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B가 음수(飮水)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크다면, 정부가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건 관계없이 이들은 협상을 통해 결국 A가 빨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7] 반대로 B의 이득이 A의 이득보다 더 크다면, A와 B는 협상을 통해 A가 빨래를 하지 않게 된다. 결국 합의에 이르는 비용이 -거래비용이- 0이라면, 정부가 권리를 어떻게 획정하건 -또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건- 주민들은 협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궁극적인 결과는 법적 결정과 독립적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정부가 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획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만약 계곡이 강을 형성하고 그 강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여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빨래, 쓰레기 투척, 낚시, 음용수로 강물을 사용한다고 하자. 또한 특정 상류지역에서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들에서 서로 다른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집행·점검하는 거래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자발적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후 쓰레기 투척 허가량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강물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래비용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을 안을 추정하고 이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적절히 추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개입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의도적으로 과도한 정부개입-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최선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6) Coase(1988), p.158 참조.

7) 효율성은 더 큰 이득을 보호하는 것인데, 협상이 이루어지면 A는 자신의 이득 중 일부를 B에게 보상하며 빨래를 계속할 것이기에 더 큰 이득이 보호된다. 김경환·김종석 번역, 「맨큐의 경제학」, 2021, pp.239~241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수치로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자연독점과 공공재의 문제

코즈의 '한계비용 논쟁' 논문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의 '한계비용 가격책정(Marginal Cost Pricing)'을 비판한다. 한계비용 가격책정 이론은 소비자들의 지불용의로 표현되는 상품의 한계편익이 그 생산의 한계비용과 동일할 때 교환의 사회적 이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을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한계비용 가격책정은 불가피하게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손실을 정부가 조세로써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8] 물론 정부의 손실 보조금은 효율성 제고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경제 내에 숨겨진 비용을 부과하는 단점이 있는데, 코즈는 이와 다른 측면에서 한계비용 가격책정을 비판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계비용 가격책정이 바람직한 이유는, 코즈에 의하면, 상품을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상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즈는 자연독점에서의 한계비용 가격책정이 해당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코즈는 가입비와 단위당 가격으로 구성되는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가 해당 생산물의 총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부요금제가 '평균비용 가격책정'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런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코즈는 자연독점뿐만 아니라 공공재, 특히 등대의 건설 유지를 정부의 정당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제학자들의 인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경제학에서의 등대' 논문에서, 등대의 요금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즉, 배제불가능성- 이유를 넘어 등대 서비스 추가 이용의 한계비용이 0이기 -즉, 비경합성-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무엘슨(Paul A. Samuelson)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9] 그는 영국에서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등대가 개인들에 의해 건설 운영 자금조달되었으며 그 소유권은 매각되고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가 정부 없이 자율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직접생산만이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기존 인식을 비판하였다.

8) 한계비용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이준구·조명환(2021), 「재정학」, 제6판, 문우사, pp.707~710 참조.

9) 1974년에 발간된 "The Lighthouse in Economics" 논문은 Coase(1988)에 포함되어 있다.

거래비용 경제학과 장기계약(또는 거버넌스)

코즈가 제기한 자연독점과 공공재의 문제는 윌리엄슨에 의해 거래의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문제로 전환되었다. 특정 자산이 특정 용도에서만 가치가 있고 그 이외의 용도에서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할 때 '자산-특정성'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 자연독점과 공공재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대규모의 자본자산이 -철로, 송전망, 고속도로 등- 필요하다. 이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그 생산과정과 상품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투자되는 자산의 특정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기회주의적 행동에 노출되어 거래비용이 매우 높아진다. 수요자들은 공급자에게 족쇄(lock-in)가 잡혀 바가지 요금을 쓸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들의 변심에 파산할 수 있다.
자산-특정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회주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장기적으로 신뢰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신뢰가능한 장기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면 공공재와 자연독점적 재화의 공급은 얼마든지 정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코즈가 제기한 영국의 등대뿐만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사우나 그리고 민간의 전력산업, 항만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장기계약 외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어도 해결이 가능하다. 예기치 않은 교란(disturbances)에 대해 응변할 필요가 있을 때, 장기계약은 가격기능(엄격한 계약)에 의한 '자동적 응변(autonomous adaptation)'을 중시하고, 거버넌스는 끈끈한 관계(느슨한 계약)에 의한 '조정적 응변(coordinated adaptation)'을 강조한다.[10)]
그런데 기업과 고객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과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다수의 고객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려울 때,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을 협의하고 이행하는 거래비용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거래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정부개입의 적절한 방법이 결정된다.
정부개입의 방법은 임기응변적 개입, 즉 '조정적 응변'을 정부에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계약과 거버넌스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대등한 법적 관계에 기초하는 사법(私法) 상의 계약, 정부의 임기응변적 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법(公法) 상의 계약(또는 행정계약), 그리고 정부개입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재량적 행정규제와 직접생산을 -공기업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생산-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의 개념이 강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지만, 이해집단의 다양한 가치들을 응변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강해지면 정치의 개념이 중시된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부개입의 수단은 시장과 정치의 연속적 스펙트럼 상에서 다양한 변형과 혼합이 존재할 것이다.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기업조직과 거래계약의 활성화,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국부의 원천은 분업, 전문화, 교환이고 분업이 심화될수록 전문화의 이득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규모에 좌우되고, 시장의 규모는 다시 거래비용의 규모에 좌우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거래계약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될 것이다.

10) '자동적 응변'은 '조정적 응변'에 비해 효율성 제고의 유인이 더 클 것이다. 자산-특정성과 응변에 대한 설명은 Williamson(2002), pp.174~176, 특히 p.180의 그림 2 참조.

국회의 예산심의과정(1984-2006) 회고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 전) 기획예산처 차관



지난번(나라재정 2024. 4월호) 정부예산편성과정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정리회고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근무했던 1984-2006년 기간중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안 제출일인 10월 2일부터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 2일까지 2개월 동안 국가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는 ①본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시정연설 ②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④수정안 본회의 의결 ⑤대통령의 증액동의 통보로 진행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실질적인 예산심의의 핵심과정이며, 정부는 예산당국이 중심이 되어 국회와 줄다리기를 벌이게 된다.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예산심의의 출발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매년 대통령은 정부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듬해 국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통상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시정연설의 내용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필자의 재직중 기억으로는 임기초의 노태우 대통령, 탄핵재판 직후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직접 시정연설을 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 매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보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매년 국정상황과 예산편성방향을 기록한 역사적 문서이며, 당해연도 국회 예산심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정부예산안 제출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즉 10월 초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예산심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기가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시정연설 후 상임위 회부 제한규정은 삭제되었다(1994.6.28.국회법개정). 비록 제한규정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시정연설 제도의 취지에 맞게 10월 초에는 시정연설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연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80-1990년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 대부분은 증액의견이었다. 가끔 정치적 이유로 감액사업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많아 상임위단계에서 감액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의원들도 인기 없는 감액보다 증액을 선호했고, 예산안을 방어하는 주무부처의 이해에도 맞았다.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증액 제기 사업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종합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증액사업도 많아 상임위 증액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래도 예산실 소관담당 직원

들은 상임위 진행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실제 예산 최종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주관심은 증액사업에 있는데 상임위의 의견은 예결위종합심사 과정에서 존중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는 몰라도 한때는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권이 폐지된 적도 있었으며(1981. 1. 29. 국회법개정),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심사"라는 이름으로 원상 회복되었다. (1983. 11. 17. 국회법개정) 이 과정에서 상임위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예결위에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를 "분과위원회"를 여러 개(예컨대, 1988예산심의의 경우 5개) 운영하기도 했다. 상임위의 심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예결위의 분과위는 그 필요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분과위는 한동안 병렬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13대 국회(1989년 예산)부터 예결위는 분과위원회 대신 "부별심사"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흔적은 지금의 국회법 제84조제3항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1994. 6. 28. 국회법개정)라는 표현에 남아 있다.

예결위 종합심사과정에서의 상임위 심사의견 경시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나쁘게 말하면 권한다툼)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당초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다(1991. 5. 31. 국회법개정)는 수준에서 상임위 삭감 의견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 "협의"토록 하였다가(2002. 3. 7. 국회법개정), 급기야는 "동의"토록 하는 규정(2003. 2. 24.)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역할변화는 예결위 종합심사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는 통상 11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크게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과정과 국회 수정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제안하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는 예결위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데, 종합정책 질의 및 답변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야당에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치 이슈를 제기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정회 및 속개가 되풀이되는 경우도 많았다. 회의가 속개되면 또다시 지루한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이 반복되었으며, 어떤 의원은 예산실 직원 사이에서 우스개 소리로 "의사진행 발언 전문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예산장관(1984-2006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의 제안설명,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어 모든 국무위원을 포함한 소관예산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 준해 진행되었으며, 회의 장소도 1980년대 초 국회의사당 본관 1층 소회의실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층 제2회의실(국회청사 건설당시 참의원 회의실로 예정된 곳)로 옮겼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질의답변형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 여러 명의 의원질의를 듣고 관계장관의 순서에 따라 질의의원별로 일괄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의원들의 질문이 예산장관에게 집중됨에 따라 답변서 작성을 위해 예산실



직원들은 질문서입수반, 질문요지청취정리반, 답변작성반, 답변정서반, 답변회수정리반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즉시에 답변서를 준비하느라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직접 당사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1987년 예산안 심사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밤늦게까지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다 답변을 못 마쳐서 다음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계속하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장관 수행비서관이 답변자료를 예산실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데 이날 따라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곧바로 자료를 갖고 장관 수행을 하느라 깜박했던 것이었다. 회의 속개시간이 되었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헤매다가 장관 관용차 트렁크에서 답변자료를 발견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과정이 끝나면 예산실직원들은 한숨 돌리게 된다. 부별심사는 경제부처, 비경제 부처 등으로 나누어 각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예산실은 제기되는 주요 증액 또는 감액사업의 모니터링에 치중하며 본격적인 예산안조정에 대비하게 된다. 종합정책 질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요 쟁점사항을 회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상의 문제로 총리, 정보기관장(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결위 출석 문제였다. 실질적인 예산내용과 상관없이 야당의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잦은 회의 정회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중 정보기관장의 출석 문제는 많은 논란 끝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출석이 불필요하게 정리되었다. 상임위원회로서 정보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보위의 심사로 예

결위심사를 대체하는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해결된 것이다.(1994.6.28.국회법개정) 또한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는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 중 한번 정도 출석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갔다.

내용상의 문제로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매년 단골 메뉴로 제기된 것으로 팽창예산의 문제, 세계잉여금의 사용문제, 예산외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의 정비문제가 기억난다. 팽창예산의 문제는 예산규모 증가는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예산이 된다는 것이 야당 공격의 핵심이었으며,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 범위내의 예산편성이라는 점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이하로 예산규모 증가율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하였다. 1980-1990년대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세수의 자연증가율 두자리 수가 매우 흔한 상황이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더라도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최근의 정치권의 논쟁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잉여금 논쟁은 구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었지만 매년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예산회계법상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그 본래 취지가 정부가 채무상환을 위해 잉여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회의 추경절차 없이 정부가 처리해도 좋다는 일종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이 오해되어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해야지 추경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추경 반대의 논리로 발전했던 것이다. 예산당국에서는 처음에는 법률내용의 설명으로 대응했으나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자 의원들의 질의 취지가 방만한 추경편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국가재정법 제정시에 세계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제도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예산외 기금정비 문제는 국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기금정비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1년 12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종식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에서의 추가 제기사항 등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수많은 감액증액사업에 대해 예산금액 즉, 숫자를 확정한다. 소위원회는 예결위원 9-13명으로 홀수를 원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었다.(최근에는 15명으로 확대됨) 소위 운영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2004년 예산심의시부터 전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회의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실질적인 숫자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정책질의 과정이 재현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예산조정이란 정치과정은 타협의 산물이기 마련인데 속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최소화된 인원만으로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를 운영하여 조정하는 편법이 시도되었으며, 진행내용 및 방법은 진화하여 갔으나 그 기본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의 공식명칭은 10대 국회(1979)까지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라 했으나, 11대 국회(1981)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심의를 거치게 된 2002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로 변경되었다. 필자가 예산실에 처음 근무할 때 이미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들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계수소위"라는 용어가 아직도 귓전을 맴도는 것 같다.

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소위에서의 토론이 매우 활발하여 밤샘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실 직원들은 최종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소위원회 회의날은 항상 밤샘작업을 해야만 했다. 어떤 소위 위원은 우황청심원을 가져와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소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기록으로 남기기엔 거북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기억한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경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항상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이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 내에서 지원될 수 없는 지방도로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많았다. 국가가 지방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제도내에 "증액교부금"이란 것이 있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대해 보조금체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당시 예산당국과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예, 철도이설사업, 전남도청이전등),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제기되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폭발적인 증액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가부를 판단할 기준도 없어서 갈라먹기식 배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로 기억한다.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큰 이슈로 불거졌고 모 의원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 결국 최종 논의과정에서 여러 건의 증액교부금사업이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예산장관의 직접적인 검토 요청에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2004년 1월 29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시에 증액교부금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 수정안은 명분상으로는 감액을 표방하지만 그 실질은 증액사업이 주관심이며,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진다. 세법개정안등 세입에 관한 윤곽이 정해지고 정책논쟁이 있는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면 이를 충당해야 할 감액사업의 판단은 통상 예산당국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감액되더라도 사업추진

에 지장이 없는 사업을 골라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는 사업(예컨대, 서울지하철, 주암댐건설등)은 지역구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감액 금기사업이 되어 예산당국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업의 규모와 건수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또는 정책토론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액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증액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필자가 직접 실무조정 작업을 담당했던 1987, 1988, 1989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기준 각각 26건, 31건, 75건의 증액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비슷한 증액 건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0년 무렵부터 증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대개 50여 건 전후였으나 그 무렵부터 100건을 넘어 수백건으로 확대되었다. 증액사업 건수가 크게 확대된 것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예산증액요구가 상례화 되었고, 지역구 의원들의 포퓰리즘화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예산당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의지가 약화된 것도 한몫 하였을 것이라고 반성해 본다. 상당수 증액사업이 주무부처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예산서에 명시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신뢰관계의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에서 상임위 삭감의견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2004년 예산심의부터 적용)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사업 건수의 대폭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예산감액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한다는 예산의회주의의 전통에서 본다면 감액건수의 증가는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실질 내용을 보면 국민의 부담 감소라는 감액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당초 "동의규정"은 상임위의 증액의견은 무시하고 예결위 위주의 증액사업은 반영되는 데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는 바, 실제로는 증액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목신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액사업은 정부 동의와 연계되어 있어서 상임위의견 존중이라는 입법취지에 크게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상임위 증액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큰 의미없는 소액 감액사업 건수만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산당국도 소위원회 운영의 촉박한 일정상 불필요한 감액사업에 적극적인 이견제시를 하지 않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을 경우에만 정부의 증액동의권과 연계하여 정치적 타결을 시도함으로써 감액사업을 둘러싼 악순환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효율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확정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리 헌법은 제3공화국 이래 12월 2일을 의결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역대 정부는 이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1980-1990년대에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도 준수되었다. 가끔 정치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곧장 복원되었었다. 특히 소위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군사작전하듯 날치기 통과를 하더라도 헌법상의 시한을 지켰었다. 예컨대, 1986년도 예산은 1985년 12월 2일 국회 146호실에서 당시 민정당 의원들만 모여서 예결위소위, 예결위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한자리에서 모두 처리하였었다. 뒤따라 왔다가 허탈한 얼굴로 회의장을 떠나던 야당 총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2000년을 전후하여 헌법 시한을 무시하는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예산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정부는 회계연도를 넘길 것에 대비해 임시예산(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준예산"이라고 한다)을 준비해야 했다. 예산실 직원들은 12월 초 예산통과 후 연말에 잠시나마 갖던 휴식시간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5년마다 대통령선거 때(1987,1992,1997,2002년) 한번씩 누렸던 10월 또는 11월의 조기통과 기회도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선거 시기가 바뀌어 아예 그런 기대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입법부의 헌법무시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던 국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2012. 5. 2. 국회법개정)을 통해 2015년예산부터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자동부의제"를 도입하였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도입 후 몇 년간은 제도 취지에 맞게 예결위가 기한내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곧바로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심사권을 상실한 예결위의 심사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변칙적인 운영이



관행화되면서 또다시 예산심의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조정된 안을 가부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본회의에서 추가적인 수정안이 발의(의원 50인 이상이면 가능)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최근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수정안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자기들이 심사하던 수정안을 사후 합의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회의 수정안 발의라고 볼 수는 없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여당 단독 강행처리가 실패한 유일무이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1993년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해였다. 쌀개방 문제가 정치쟁점화되어 전례없이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의 물리력 행사 속에서도 가까스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고 곧바로 본 회의 처리를 진행하였었다. 1993년 12월 2일 밤에 일어난 일이다. 사회를 보러 본 회의장에 들어가던 국회 부의장이 야당의 물리력행사를 뚫지 못하고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자정이 되자 본 회의는 개회도 못한 채 산회되었다. 그후 12월 9일 국회의장 주도로 협상을 통해 추곡수매 지원 2,456억 원 등 총 19건을 증액하는 예결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었다.

국회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증액동의 통보와 예산공고

국회에서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수정안은 각 항별 금액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57조) 통상 수정안의 본회의 의결 직전에 동의여부 의견을 묻고 정부측을 대표하여 총리 또는 예산장관이 구두로 포괄적인 형식의 동의 의견을 제시한다. 국회는 의결후 본회의 수정안을 정부에 송부하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 요청서를 보낸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공포절차가 없고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다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증액동의 의견을 국회에 통보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법적으로는 국회의 수정안 중 정부동의가 필요한 증액사업에 대한 국회의결은 해제조건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증액동의제도는 국민의 부담 제한이라는 예산의회주의의 정신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제기되더니 급기야는 증액동의제도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헌헌법 제정당시 유진오 박사가 영국 및 프랑스의 의회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 헌법에 도입한 제도가 50년이 지난 후에야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재정포퓰리즘의 증대와 여소야대하에서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논쟁 등을 감안할 때 정부도 증액동의제도 운영의 원칙을 재정립함으로써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국회의 예산처리 관행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증액동의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은 정치과정이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예산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예산은 법률과 달리 입법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1980-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국회 예산 심의과정의 변화를 보면 행정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관여 확대라는 일관된 흐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각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여 본다.



K-culture 진흥을 위한 재정의 역할

배상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멘토단 교수

1. 한국의 K-culture 태동 배경

한국의 K-컬처는 한국의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글, 음식, 패션, 난방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문화적 현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한류는 처음에는 태권도, 드라마, 이후에는 영화, 그리고 음악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더불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게임, 음악 및 영화 등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대중화도 한류 확산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한류 확산 계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이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문화예산 1% 시대를 열면서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문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즉 단순히 보는 관광(sightseeing)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관광형태인 머무르며 즐기는 관광(staying tour)이 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개최 시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템플스테이, 경복궁 야간 개장, 4대 궁궐 문화시설 체계적 안내 등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 문화 체험과 멋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한국 대중문화의 독창성과 매력적인 콘텐츠 탄생을 저해하는, 즉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영화, 음반 등의 사전심의제도 폐지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한류 탄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서 독창적인 장르 개척과 퍼포먼스 개발, 아이돌 탄생 등으로 이어지며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는 등 문화계의 노력,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스트리밍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문화 다양성 수용 흐름이 맞아떨어져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K-culture 확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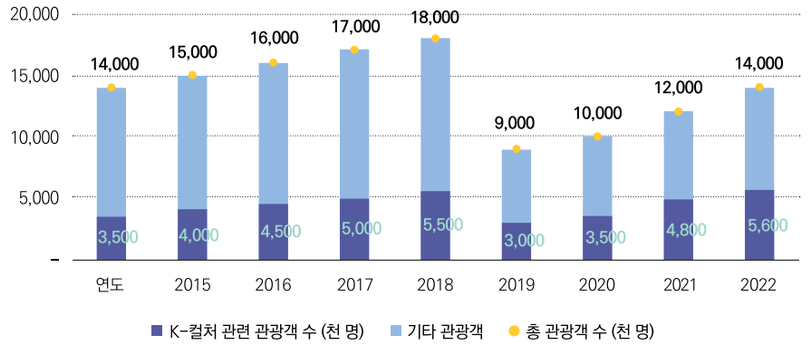
K-컬처의 탄생과 확산은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가 상호 연계된 복합적인 문화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35개의 해외문화원을 설치·운영하며,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 문화의 홍보 전진기지로서 관광 안내, 한국 문화 행사 주관, 한국어학당 운영, K-pop 예선 대회 개최, 아리랑TV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부문별로 한류 확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국인의 한류 관광 부문이다.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통해 4대 궁궐뿐만 아니라 한식, 한국어 배우기, 드라마, 음악 등으로 K-컬쳐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갔다. 정부, 공공기관, 관광업계도 한국 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된 관광 안내서, 모바일 앱,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한옥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전통 예술 공연 관람 등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월드컵 전후로 템플스테이 예산을 편성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K-culture 관광객은 코로나 이후 일반관광객 증가 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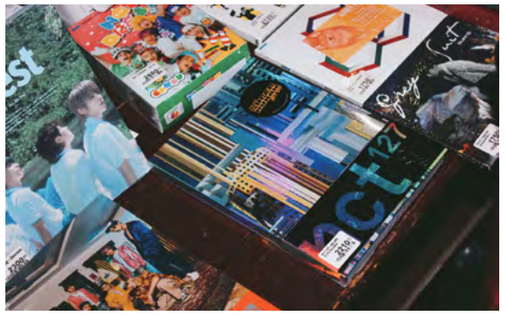
둘째로, 한국 영화 및 드라마도 한류를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뛰어난 스토리텔링, 고퀄리티의 제작, 창의적인 연출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상 역시 수상하였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하였다. 이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지역적인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영화 및 드라마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영화 시청뿐만 아니라, 한국 방문과 한국 대중문화 사랑으로 이어졌다.

셋째로, K-pop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K-pop의 성공은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 매력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덕분이다. K-pop은 매력적인 음악과 아이돌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방탄소년

[표 1] K-컬처 관련 관광객 수 변화



출처: 한국관광공사



단, 블랙핑크 등은 독창적이고 중독성 있는 음악, 화려한 안무, 비주얼적인 요소들로 K-pop의 큰 장점을 보여준다. 또한 K-pop 아이돌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K-pop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K-컬처의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액 〈표2〉은 약 132억 달러에 달하였다. K-컬처 관련 콘텐츠 부문별 수출 규모(2022년)를 살펴보면, 게임 수출은 90억 달러로 문화 콘텐츠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했다. 음악은 9억 달러로 14%,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은 약 13%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인터넷망 구축 국가로, 초고속 인터넷망 덕분에 온라인 게임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정부의 국가기간산업망 구축과 문화산업 발전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3. K-컬처의 확산과 재정 지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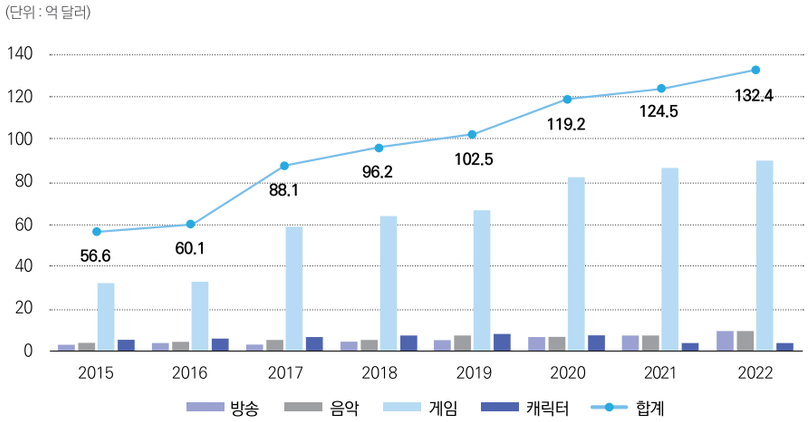
문화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재정 지원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한다. 우리 문화와 예술이 미래형 소프트웨어(GPT 등)와 연계될 때 질 높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도 보는 관광(sightseeing), 머무르는 관광(staying tour)을 넘어 지식관광(knowledge tour)으로 뭔가 배우면서도 재미를 느끼는 질 높은 관광으로 나아갈 때 개인의 삶도 향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공감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표3〉은 6.9조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 증액하였다.

첫째, 재정 지원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성장률은 제조업보다 더 높아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제조업 평균은 5.7% 성장하였으나, 문화산업은 21.1%, 관광산업은 11%, 레저스포츠 산업은 15% 성장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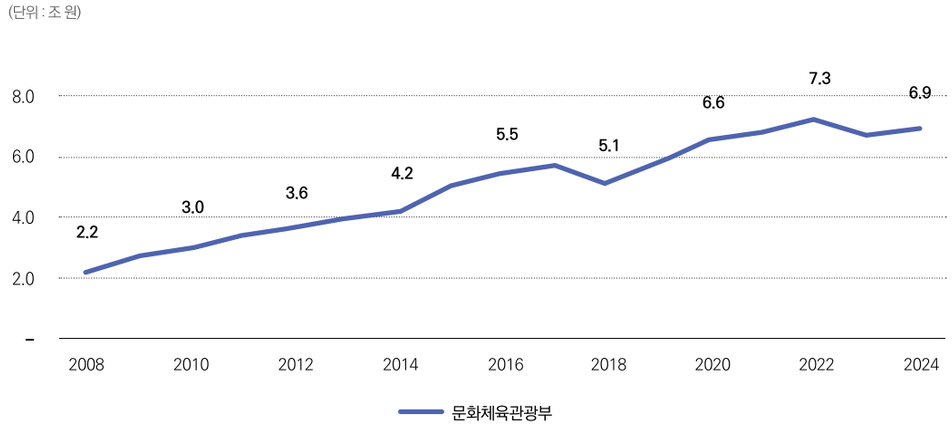
둘째, 정부의 재정 지원과 문화 인프라 구축, 민간 기업의 혁신적 투자가 결합되어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은 혁신적 문화콘텐츠 개발이 지속되고,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즉,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K-컬처가 세계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 문화콘텐츠 수출액 추이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표 3] 부처별 재정지출(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기획재정부

친환경 올림픽: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교훈

남시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은 8월 11일에 마무리되었다.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특히 한국 대표팀이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대회가 진행될수록 한국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프랑스는 운동선수들의 경쟁 외에도 성평등을 비롯하여 여러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중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편으로 논란이 된 것이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부분이었다.

파리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센 강에 대한 정화작업, 디젤 발전기 축소 및 자전거 친화적 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시설 활용 및 지역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기존 올림픽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올림픽 숙소 내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선수들의 식사에 육식을 줄인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높은 수준이며, 이것을 더 알려야 하고 선수들도 인지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하지만 바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도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채식 위주 식사는 영양 공급에 민감한 운동선수들의 컨디션에 악영향을 준다.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였던 셈이다.

결국 몇몇 선진국들이 자비로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돈을 내고 별도의 숙소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어났고, 올림픽 주최측도 뒤늦게 이동형 에어컨과 육류 공급을 늘렸다. 이로 인해 선수들에게 동일한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선진국 선수들이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라는 취지도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일은 환경 목표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훈을 준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난 규모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특정한 행위를 적당한 수준에서 줄여야 한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일 잘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자동차 휘발유에 세금을 붙여서 자동차 운행을 적당한 수준에서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거나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부과되는 세금을 더 높이면 자동차 운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세금 수입을 통해 환경 개선 작업에 이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부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어서 단점도 있다. 세금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인지하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세금을 내면 운행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 만큼 사람들의 운행을 적당히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 부담은 더 커지고 고소득층은 어렵지 않게 운행을 계속하게 되는 불평등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일 외에 홍보 활동도 어느 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나쁜 행동은 아니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일 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면 이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위의 두 방식 모두가 갖는 단점은 자동차 운행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불평등성이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전면금지 혹은 순환금지 방식. 예를 들어 자동차 5부제를 실시하여 돌아가면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파리 올림픽의 경우, 이러한 홍보 활동과 순환금지 방식의 단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에어컨 사용과 육식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통제하여 다양한 규모의 행사에서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침을 진행하면서 많은 반발을 샀고, 선진국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체 비용을 사용하면서 불공정 문제까지 발생했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올림픽에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은 것이다.

이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러 공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효율성과 사람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공공 정책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호불호가 나뉘게 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람들이 반대가 심하면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중단되기 쉽다.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하거나, 최소한 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절감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을 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한 행동도 필요하지만 무리한 금지는 반감을 부를 수 있다. 여러 모로 가격을 통한 접근이 장점이 많지만, 현실에서는 가격 인상 역시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는 한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 및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높은 이유는 5부제 등 다른 방식보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류세가 꽤 오래전부터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적 불만을 갖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반발을 부르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해제하거나 감세를 할 때는 늘 주의해야 한다. 제도를 다시 도입하거나 다시 세금을 올릴 때는 반발이 커져 어려워지므로 감세 때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2020년을 전후해서 종부세 인상과 공시지가를 두고 발생한 정책논쟁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지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지지하는 측에서 당시에 이 세금을 마치 벌금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주택을 다수 보유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오히려 많은 반감을 부르고 종부세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은 내용도 연구보고서에서 발견되면 외부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 환경이 연구 초반부터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미리 유의해야 한다.

기후 위기 문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RE100 등 친환경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노력이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용 압박을 느끼면서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다.

전기 요금을 올릴 경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별도의 에너지바우처 지급이나 노동환경 감독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전기 요금 인상 외에 금지 방식이나 캠페인 방식은 한계가 많아서, 공공기관 전기절약 캠페인이나 냉방기 사용 금지 수준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영향을 받는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요금인상은 상당히 합리적인 대책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저탄소 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이것들 중 효과가 있었던 부문은 향후에 다양한 대형 행사에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준비가 부족했고 반발이 많았던 부분은 비록 이번엔 비판을 받았지만 보완해 나간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번 올림픽이 성공한 면과 실패한 면 모두가 미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경제기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경제기사 활용법



백미르(지음) ● 다온길(펴냄)

책 속으로

경제기사 헤드라인을 해석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헤드라인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 하는 역할이다. 헤드라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키워드는 기사의 핵심 주제나 내용을 나타내며, 전체 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에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결정"이 주요 키워드이다. 이 키워드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는 중요한 경제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다.

신문, 인터넷, TV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기사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 경제기사를 읽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급락했다면 단순히 표면적인 기사 내용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경제기사의 배경,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진정한 경제기사를 읽는 것이 된다.

이 책 「경제 기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경제기사 활용법」은 총 6장으로 나눠 정보를 제공한다. 1장에서는 경제기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 헤드라인 해석 방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경제기사를 활용해 실질적인 시장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다룬다. 3장에서는 경제기사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4장에서는 기업의 전략 변화를 읽는 방법을 통해 기업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5장에서는 경제기사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룬다.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제 개편 이해, 금리 정책 변화의 영향, 무역 정책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 변화 소식의 활용 방법,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경제기사에서 미래 경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방법을 다룬다. 기술 혁신이 경제기사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글로벌 경제기사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방법, 새로운 산업 동향 파악 방법, 위험 신호 식별 방법, 미래를 위한 재무 수립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황성현(지음) ● 해남(펴냄)

책 속으로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재정이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구축효과), 이를 막기 위해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재정적자의 화폐화(monetization of public debt)라고 한다.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와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괜찮다고 이론적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흔히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비교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당시의 기준이었던 재정적자 GDP의 3%, 국가채무 GDP의 60% 등을 적정규모 판단의 기본적인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처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불균형 · 불평등 성장전략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들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루는 재정 본연의 기능 면에서 정부 수립 이래 늘 작은정부를 운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한 결과, 인구 ·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각자도생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 낳아 기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인구소멸의 길로 가는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개인과 시장에게만 맡겨 왔기 때문에 초래되고 심각해진 문제들이다.

이 책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는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근본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 한 조세 ·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요양 · 간병 ·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소비자 보호 · 근로자 안전 ·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을 더 발전시키는 등의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재정 운용이 지속가능하려면 증세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증세 방안과 부문별 재정지출의 개선 방안, 그리고 정부 및 재정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근본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 한 조세 ·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증세 방안과 부문별 재정지출의 개선 방안, 그리고 정부 및 재정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AUGUST

2024

8

재 정

-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확정

경 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7.25.)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발표 (한국은행, 7.25.)

- 2024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
- 건설업에서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4% 감소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1.3% 감소하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0.2%를 하회

1월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2월

재정
- 2023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3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3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3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5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4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2000~23년)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8월

재정
-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5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우리나라 기업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는 무엇일까요?

답

지난 호 정답 : **국유재산관리기금**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135
010-****-*771
010-****-*499
010-****-*121
010-****-*014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기간 2024.8.22.~9.13.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구독자 설문조사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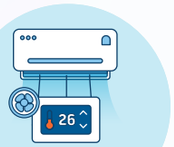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